

민주, 민생+경제 회복 35조 추경 제안...국힘 “대선용 매표”

지역상품권 지급 등 소비 진작 장려, SOC·AI 투자 확대 등 담아 국힘 “예산편성권, 정부 권한...조기대선 과몰입한 포퓰리즘 추경”

여야가 이번에는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라며 평가절하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민생 회복 예산에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가 포함됐다.

13조원을 할애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개인 카드 지출액이 월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에도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의 8대 분야에 대해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 바우처 사업도 5000억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염 정곡에 따른 소비 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 지원 등에 2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단기 복무 장려금, 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 개선,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000억원을 지원하고,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서민 금융 확대와 장애인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도 5000억원을 편성했다.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원을 담았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예산 8000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300만원→400만원)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도 1조원을 편성했다.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 보육 등에도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장 예산도 포함했다.

정책위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화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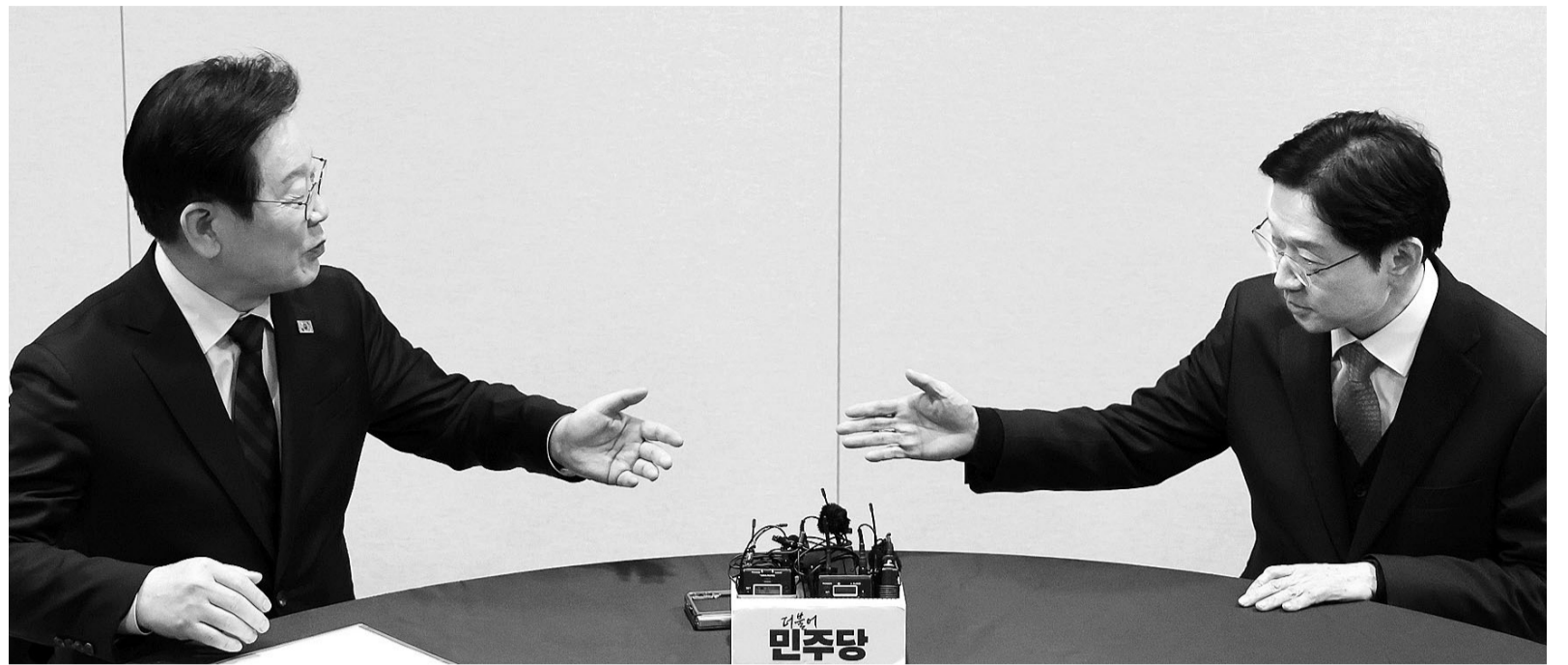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구두 논평에서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과몰입해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의도”라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 나왔다. 민생을 위하는 척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만, 속셈은 정권 전탈의 늑대 심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13조원 추경 제안에 대해서도 “한두 달 반짝 효과를 위해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재원은 미래 세대의 빛이다. 이보다 더 나쁜 정책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추경 제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하자면서 왜 지난해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라며 “우리 당 요구에 답변이 있어야 (추경) 협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회에서 만난 뒤 서로 발언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김경수 “헌정수호세력 힘 합쳐야”

국회에서 만남...김 “다양한 목소리 담은 공간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이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김 전 지사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유학 중이던 독일에서 급거 귀국해 이 대표를 만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우선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당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당으로 탈당 처리된 뒤 최근 복당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헌법 파괴 세력과 반민주 세력이 준동하는데, 헌정 파괴 상황을 극복하고 가장 큰 가치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수호 세력,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헌정수호 대연대”라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으나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는 길에 김 전 지사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최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통 큰 통합’을 위해 당내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데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가야 한다. 지사님 지적이 완벽히 옳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 어지러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이루려면 더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 당이 더 다양해져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팬덤정치의 폐해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당원이 진정한 민주당의 주인이 되도록 토론과 속의 가능한 다양한 공간을 열어 줘야 한다”며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꾸는 것은 민주적 토론과 속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추가 개최

21일 국방부·25일 행정부 인사 대상...尹 등 증인 136명 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관련 청문회를 두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내란혐의 국조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일정 변경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위는 오는 21일 국방부와 군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2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

형 전 방첩사령관 등 136명이 증인으로, 불지역 뉴스타파 기자와 노영희 변호사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도 포함됐으며,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의 위관급·영관급 장교들과 대통령령호처 소속 경호관, 국정원 요원 등 실무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추가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광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

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대령)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증인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대령이 증인 명단에서 들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뭐가 찢어져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국정조사 절차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인들을 고르고서 불러와서 다 들어보아야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난쟁이 형태로 갈 개연성이 많다는 판단하에 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회유, 위증교사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교원 정신질환 검증 강화 ‘하늘이법’ 추진

국민의힘이 13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